

고용노동부 장관, 성동구청 합동 건설현장 불시점검으로 추락사고 예방

- 충분한 공기·비용 보장 등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책임 강화
- '26년부터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사업 운영토록 지원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3일(화) 13:30경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성동구청과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엘리베이터 설치 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외부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등 다양한 추락 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점검 후에는 모바일을 통해 17개국 언어로 건설 현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안심성동 프로젝트’(‘25년 7월~)’를 시연하여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동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안심성동 프로젝트와 같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할 방침(‘26년안 143억원 신설)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하고, 민간에도 충분한 공사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광주청, 창원·부천시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드렸듯 안전한 일터를 위해 충분한 공사 기간·비용을 확보토록 하여 건물을 ‘빨리’ 짓는 것보다 ‘안전하게’ 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며,

“노사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 세부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움직인다면 산재 예방의 힘이 배가 될 수 있으며, 오늘을 계기로 현장에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동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전일터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경민 (044-202-888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정탁 (044-202-8881) 이근배 (044-202-8882)

